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사실로'

"근무지 밖에서 파일생성" 당사자 "기억 안나"
진상조사단, 전 조직국장 당 윤리심판위 회부
"PC 하드 제출은 안돼"…당원 관리 '이율배반'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의 당원 명부 외부 유출이 사실로 확인됐다.

당원 명부 관리책임자인 직전 조직국장은 당 윤리심판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찰이 제출을 요구한 당원관리용 PC에 대해서는 "당원 정보보호 차원에서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혀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 명부 유출 진상조사단은 8일 조사 결과 브리핑 자료를 통해 "전임 조직국장 A씨로부터 근무기간 중 사용한 당원관리용 USB를 제출받아 복구작업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공식 근무공간이 아닌 곳에서 당원 명부와 관련된 새로운 생성파일이 이뤄진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공식 근무공간이란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실을 말한다.

당원 명부는 1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광주지역 당원 개개인의 실명, 휴대전화 번호, 주소, 입당 일시, e-메일 정도 등 민감한 정보가 죄다 포함돼 있어 조직국장 등 특정 당직자를 제외하고는 접근 조차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정당법 등에 따라 외부 유출은 철저히 금지돼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직전 조직국장 A씨는 중앙당으로부터 건네받은 광주지역 당원 명단을 근무지 이외 지역에서 다른 PC나 노트북에 다운로드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A씨는 시당 진상조사단에 USB를 제출하면서 기존 자료를 모두 삭제한 뒤 '조작된 UBS'를 제출했다가, 진상조사단이 자체 복구작업을 거쳐 재차 캐묻자 "기억이 없다"고 발뺌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명단이 누가에게 건네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지역 정가에서는 "유출된 정보가 A씨와 특수 관계인,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 B씨 측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뒤늦게 B씨 측이 지난 연말과 올해 초 당원 개개인의 실명으로 발송한 문자를 '당원 명부 유출의 단서'로 보고 B씨 측에 지난 6일까지 문자수신자 명단 제출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제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B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 기밀성이 보장되는 상황이 올 때 수신자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혀왔다.

'당원관리용 PC 하드디스크 이미징(자료복제)을 제출해 달라'는 경찰의 두 차례 요구에 대해서는 중앙당과의 논의 끝에 "제출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당원들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미 수 만명의 당원, 그 중에서도 경선 투표권을 쥐고 있는 상당수 권리당원들의 명단이 외부로 유출됐고 시당이 이를 확인했음에도 정작 자료 제출 거부 사유로는 '당원 정보보호'를 내세워 "이율배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시당으로선 최선을 다해 훼손된 증거를 복원하고 유의미한 진술과 증거도 찾아냈다"며 "다만 당원 명부는 당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없는 점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권리당원을 포함해 수 만명의 광주지역 민주당원들에게 실명이 적힌 신년 문자메시지를 발송, 당원명부 불법 취득 의혹을 사고 있는 당 사자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소속 정무직 5급 공무원 C씨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뉴시스

한복 입고 윷놀이하는 외국인 학생들 설 명절을 앞두고 8일 오후 대전 서구 배재대학교 외국인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윷놀이를 하고 있다.

한전, 복마전 '태양광 비리' 재발방지…특별감사제 도입

한국전력이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임직원 비리 근절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임직원들 사이에서 태양광 사업관련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이득을 챙기는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감사원의 태양광 부조리 감사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처리 시 비리 근절을 위해 앞으로 '자체 특별감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한전은 태양광 사업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15일부터 홈페이지에 태양광발전사업 신청 순서, 용량·업무 진행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비리의 온상인 1MW(메가와트)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의 계통 연계 제한으로 인한 부조리 발생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10월31부터 1MW이하 용량의 태양광 발전에 대해 비리 원천 차단을 위해 '무조건 계통 연계 접속'을 허용하고 있다.

또 직원 가족이 신재생 발전 사업을 할 경우 자율 신고하는 제도도 지난해 10월 말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은 4촌 이내의 친족이나 그 배우자 중 한전 직원이 있는 사람으로, 신재생 전력거래 계약을 신청할 경우 해당 내용을 자율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한전 직원이 가족들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한 것이 드러난 이후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감사원이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인허가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태양광 발전소를 저가로 분양 받은 한전 지역본부 직원 74명에 대해 감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감사 대상 한전 지역본부 직원들은 태양광 발전소 부지 인근의 송배전 선로 여유량과 변전소·변압기 용량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거나 접수 과정에서 순위를 바꾸는 등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당시 확인됐다. 이들은 그 대가로 가족 명의로 100킬로와트(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무상으로 받거나 저가로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났었다.

한전 관계자는 "태양광발전 비리 근절을 위해 사업 신청 접수 부서를 일원화하고, 인터넷 접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화된 제도개선을 통해 부조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비 명목 돈받은 혐의 변호사 불구속 기소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검사에게 로비해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사건의뢰인으로부터 수임 약정료 이외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변호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사건 의뢰인 B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검사에게 로비해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는 명목과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A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총책에 전달 20대 덜미

전화금융사기로 인출된 금액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넘기는 현금 수거역할을 한 2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8일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51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은행 앞에서 김모(검거)씨가 인출한 현금 900만원을 건네받아 총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광주와 부산, 대전 등지를 다니며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 동안 4억1000여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돈을 받아 총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총책의 지시를 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1000만원 당 10만원의 댓가를 받기로 하고 대부업체로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취직했다. 3개월여동안 현금 수거역할을 한 대가로 7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자신의 일이 이상하다고 여겼지만 보이스피싱 인지는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금 인출책 김씨를 검거한 뒤 조사를 벌여 "이씨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였다.

돈이 전달된 장소를 확인한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이씨의 인상착의 등을 특정했다.

돈이 전달된 계좌까지 확인한 경찰은 잠복 등을 통해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는 한편 총책까지 검거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고급 양주 마시고 돈만 챙겨 달아난 40대 구속

전국을 돌며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고급 유흥주점만 골라 현금을 훔쳐온 40대가 출소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A(45)씨를 절도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고양시 일대 유흥주점에서 수십만원 짜리 양주를 시켜 마시며 여성 종업원에게 "팁을 주고 싶은데 현금이 없으니 돈을 주면 나갈 때 카드로 모두 계산하겠다"고 속여 10만~20만원씩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총 150여만원을 갖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여성 종업원이 자리를 비우면 계산대에 있는 현금까지 챙겨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등의 혐의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출소한 A씨는 서울과 천안, 부천 등 10개 경찰서에서 같은 혐의로 이미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종 사기수법으로 인해 피해가 커질 것을 대비해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편의점에 우연히 들어온 A씨를 발견하고 검거했다.

특별한 거주지가 없는 A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찜질방과 고시원 등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범죄를 막기 위해 여성 혼자 일하는 업소 등을 위주로 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추가 피해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